

# 해방직후 부산항을 통한 일본인 귀환

최 영 호

(영산대학교 일어학과)

## 目次

- I. 머리말
- II. 패전 직후 일본인의 귀환 상황
- III. 조선총독부의 귀환대책과  
부산안내소의 활동
- IV. 미군정청의 귀환대책과  
부산지역 군정부대의 활동
- V. 일본인 세화회의 조직과 활동
- VI. 맺음말

## I. 머리말

일본 패전 당시 부산에는 약 8만 명이 거주했다. 자료상 정확한 통계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추정할 수밖에 없다. 패전 당시 경남 도지사를 역임하고 있던 노부하라 기요시(信原聖)는 부산에 8만 명의 일본인이 거주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sup>1)</sup>, 부산 안내소 소장을 담당했던 마루야마 헤이이치(丸山兵一)는 부산에 7만 명의 일본인이 거주했다고 추정하고 있다.<sup>2)</sup>

공식적인 통계자료로서는 부산상공회의소가 1944년 12월 말 시점에 집계한 통계자료가 패전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통계로서 인용할 가치가 매우 높다. 이 통계에 의하면 부산시 거주자 71,824명을 포함하여 경남에 106,098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한반도 전역에 걸쳐 809,900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경기도(221,100명)에 이어 부산 경남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전국의 도시(府) 가운데에서도 서울(京城府)의 161,818명 다음으로 부산에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sup>3)</sup>

1) 信原聖, 1961, 「終戦以後の慶尚南道」, 『同和』 165号 (1961年 9月 1日), p. 4.

2) 丸山兵一, 「慶尚南道及び釜山に於ける引揚状況」, 加藤聖文(編), 2002, 『海外引揚関係史料集成(国外篇)第19巻』(朝鮮篇二「終戦後朝鮮における日本人の状況および引揚(二)」), 東京: ゆまに書房, pp. 300-302. 이 기록은 1945년 12월 30일 마루야마가 부산일본인세화회 안내소장을 역임할 때 집필한 기록 「鮮内に於ける日本人の引揚状況」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는 1946년 8월까지 부산에 잔류하여 세화회 원호부장으로 일본인 귀환자 원호업무를 수행했다.

3) 丸山兵一, 「朝鮮に於ける日本人の引揚状況」, 加藤聖文(編), 2002, 위의 책, pp. 318-320. 조선총독부 자료로서는 1944년 5월의 통계자료가 패전일에 가장 근접한 통계로 인용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釜山府 61,081명을 포함하여 경남 지

일본의 전황이 불리해짐에 따라 한국인과 일본인이 일본 본토의 공습을 피해 일본에서 한반도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았던 점이나<sup>4)</sup> 패전에 임박하여 소련이 참전하면서 북한이나 만주지방으로부터 남한지역으로 피난해 오는 일본인이 많았던 점<sup>5)</sup>에 비추어 볼 때, 패전 당시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 인구는 1944년의 거주자 통계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전쟁 말기에 일본 본토와 한반도에서 연합군의 공습에 대비하여 도시 소개(疏開)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건물과 인원의 소개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미미한 수준에서 소개가 실행되었다. 특히 인원의 소개는 패전에 임박한 8월에 들어서야 일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sup>6)</sup>. 7월과 8월에 걸쳐 수차례에 걸쳐 미군 비행기가 부산에 내습하게 되고<sup>7)</sup> 소련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면서부터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으나, 상대적으로 북한 지역의 일본인들에 비해 남한 지역 거주 일본인들 사이에는 일본의 패전이 가까워 오는 시점에도 패전을

---

역에 총 97,345명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森田芳夫, 1964, 『朝鮮終戰の記録: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東京: 巖南堂書店, pp. 7-10.

4) 테평양전쟁 말기에 이르러 패전 때까지 민간선박을 타고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로 피신했던 일본인과 한국인이 도합 30만 명 이상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Wagner, Edward W., 1989, 『日本における朝鮮小數民族: 1904年~1950年(復刻版)』, 東京: 竜溪書舎, p. 58; 樋口雄一, 1986, 『協和会: 戦時下朝鮮人統制組織の研究』, 東京: 社会評論社, p. 196.

5)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 66.

6) 김인호, 2004. 9, 「1945년 부산지역의 도시소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호, pp. 315-331

7) 최해군, 1997, 『부산7000년, 그 영욕의 발자취②: 개항부터 일제말까지』, 부산: 도서출판 지평, pp. 272-273

예측할 만한 분위기가 적었으며, 실제로 교전상황을 목격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패전을 맞게 되었다.<sup>8)</sup>

다만 부산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미군 공습이 많아서 패전을 앞두고 일본과의 사이에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패전 당시 조선총독부 부산교통국장을 역임한 다나베 다몬(田辺多聞)은 패전을 전후하여 부산항 교통상황을 일지(日誌)로 남기고 있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 패전을 한 달여 앞둔 7월 12일 부산항에 기뢰(機雷)가 투하되어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날 부산항으로 입항하려던 덴잔마루(天山丸) 선박이 마산항으로 옮겨 입항하게 되었고, 그 후로 일본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대형 선박들은 울산, 포항, 마산 등의 항구를 이용하게 되었다.<sup>9)</sup> 7월 14일과 28일에도 미군 비행기가 부산항에 내습하여 기뢰를 투하했다. 7월 29일에는 구포 물금 사이의 열차에 미군기가 총격을 가하여 승무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으며 8월 10일 새벽에는 수정동에 폭탄을 7발 투하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이후 패전 때까지 연일 부산 시가지에 공습이 있었으며 쉴 틈 없이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교통국 직원 가운데 다른 지역으로 전근 발령이 나기를 희망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sup>10)</sup>

패전이 되자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이 귀환을 위해 부산항으로

8) 若槻泰雄, 1991, 『戦後引揚げの記録』, 東京: 時事通信社, p. 231;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編), 1993, 『資料所在調査結果報告書(Ⅰ): 資料が示す今次大戦における恩給欠格者戦後強制抑留者及び海外引揚者の労苦』, 東京: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p. 193.

9) 田辺多聞, 「終戦前後の釜山地方交通局管内事情」, 鮮交会(編), 1976, 『朝鮮交通回顧録: 終戦記録編』, 東京: 鮮交会, p. 250.

10) 같은 책, pp. 250-251.

몰려들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일본에 귀환하기에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패전 이후 남북한 거류 일본인은 물론 중국에 거류하던 일본인들 가운데 일부도 부산항을 경유하여 귀환해 갔다. 마루야마의 자료를 통하여 귀환항으로서 부산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점령 당국의 허가를 받아 일본인을 송출한 한반도 항구 가운데 부산항이 패전 이후 1948년 7월까지 총 674,406명을 송출한 것을 나타나, 귀환자 총수의 89.7%를 송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군산항은 1946년 6월 한 달간 약 4,300명(0.5%)을, 그리고 인천항과 주문진항은 1946년 6월부터 7월까지 각각 약 4만명(5%)과 1만명(1%)을 송출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요컨대 부산항은 귀환자 송출량에 있어서나 송출 기간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귀환하는 일본인의 대부분을 송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패전 직후 부산항을 통하여 일본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얼마나 귀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본인 귀환자의 원호와 수송을 둘러싸고 어떠한 조직이 관여했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Ⅱ. 패전 직후 일본인의 귀환 상황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한 이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들을 둘러싼 치안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소련군이 곧 서울에 입성한다는 소문이 나들면서 일본인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투어 은행예금을 인출하고 가능한 대로 귀환을 서둘렀

11) 加藤聖文(編), 2002, 위의 책, p. 323.

다. 가재도구를 헐값에 내다 파는 일본인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사재기하기 위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인 집에 몰려들었다. 발 빠른 일본인들은 일찍이 8월 16일부터 부산항을 비롯한 항구나 부두로 달려가 화물수송선, 범선, 어선 등 각종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 도항에 나서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선박을 빌려 도항한 사람도 있었으며 상업용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청 등 관공서나 일본인 단체가 알선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sup>12)</sup> 다나베의 기록에 의하면 8월 17일 아베노부유기(阿部信行) 총독의 부인을 포함한 고관 부인 일행이 비밀리에 부산항에 도착하여 기범선(機帆船)에 산더미 같은 짐을 싣고 일본을 향해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악천후로 파도가 심하여 얼마 가지 못하고 짐을 거의 바다에 내던지고 가까스로 부산항에 회항했으며 서울로 되돌아가는 해프닝이 있었다.<sup>13)</sup>

부산 거주 일본인 가운데는 미군이 진주해 오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선박을 빌려 서둘러 귀환한 사람이 많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패전 당시 삼화(三和)고무 주식회사 사장으로 부산상공회의소 총재를 맡고 있던 요네쿠라 세이자부로(米倉清三郎)와 조선방직 전무 도키오카 쇼헤이(時岡昇平)를 들 수 있다. 그들은 패전 직후 고무신 제품과 광목을 한꺼번에 시장에 방출하고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 일본으로 귀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sup>14)</sup> 나중

12) 若槻泰雄, 1991, 위의 책, pp. 233-235.

13) 鮮交會(編), 1976, 위의 책, p. 251.

14) 高崎宗司, 2002, 『植民地朝鮮の日本人』, 東京: 岩波書店, p. 199; 박원표, 1965, 『부산의古今』, 부산: 현대출판사, pp. 234-235; 차철욱, 1996. 6,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 사업체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성격』 『지역과 역사』 1호, pp. 2-3. 도키오카는 부산일본인세화회에서 초기에 상담역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에 만들어지는 부산일본세화회에 의하면 부산 경남 거주 일본인들 가운데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에 걸쳐 미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선박을 빌려 귀환한 사람이 33,000명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sup>15)</sup> 따라서 이보다 훨씬 많은 일본인들이 패전 직후 부산을 빠져나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패전 직후 조선총독부는 일본인들의 무질서한 귀환 쇄도를 통제하기 위해 무리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귀환자들을 수송할 교통편이 형편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하던 부관연락선 정기 항로가 두절된 데다가,<sup>16)</sup> 패전 한 달 전부터 미군 비행기가 부산항에 내습하고 기뢰를 투하하면서 대형 선박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sup>17)</sup> 8월 17일 부산지방교통국은 귀환선박 조달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종래 부관연락선을 관할하고 있던 히로시마(広島)철도국에 선박배치를 요청했다.<sup>18)</sup> 이 때 화물선에 의한 긴급수송 방침이 결정되어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반도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 27척이 귀환자들을 싣고 하카타항을 향해 부산항을 출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9)</sup> 한편 조선총

---

나 45년 11월 시점에는 이미 세화회 임원명단에 거명되고 있지 않다. 森田芳夫 長田かな子(編), 1980,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第二卷』, 東京: 巖南堂書店, pp. 396-397.

15) 加藤聖文(編), 2002, 위의 책, p. 310.

16) 1905년에 취항한 부관(釜關) 정기연락선은 1945년 6월에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홍연진, 2006. 12, 「부관연락선 시말과 부산부 일본인 인구변동」 『한일민족문제연구』, 11호, pp. 152-155.

17) 鮮交會(編), 1976, 위의 책, pp. 249-250.

18)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 122.

19) 같은 책, pp. 122-123.

독부 교통국 총무과장은 8월 21일에 비행기로 도쿄로 날아가 내무성과 운수성과 귀환 선박 조달을 위한 교섭을 마치고 이틀 후에 서울로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으나,<sup>20)</sup> 그 교섭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나베의 일지 기록에 의하면 8월 20일 패전 이후 최초로 興安丸(5,600톤급)이 부산항에 입항하여 다음날 일본인 귀환자들을 가득 싣고 출항했다고 하며, 8월 22일에는 德壽丸(2,600톤급)이 부산항에 입항하여 24일에 출항했다고 한다. 이 선박들은 지난 날 부관연락선으로 활약했던 것으로, 패전이 되어 귀환자들을 수송하는 선박으로 활동하게 된다. 연합국군사령부(SCAP)가 24일 오후 6시를 기하여 100톤 이상 선박의 항행을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선박들은 한 차례씩 부산항을 다녀간 후 일시 운항을 중단했다. 德壽丸이 떠나고 나서도 부산항 부두에는 2,000명 정도의 일본인 귀환자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 후에도 귀환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정식으로 귀환선 운항이 개시되는 8월 31일 시점에는 11,000명 정도가 부산항에서 대기했다고 한다.<sup>21)</sup>

일부 일본인들 중에는 대형 귀환선 탑승을 기다리지 못하고 소형 선박을 빌려 서둘러 귀환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소형 선박들이 도착하는 일본의 항구는 한반도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하카타(博多), 가라츠(唐津), 시모노세키(下關), 센자키(仙崎) 등이었다. 이외에 가까운 포구나 해안 부두에 상륙했기도 했으며 멀리는 오사카(大阪)까지 선박을 빌려 타고 가는 일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8월 하순부터 9월에 걸쳐 현해탄 해상에서

20) 같은 책, p. 122.

21) 加藤聖文(編), 2002, 위의 책, pp. 252-253.



빈번하게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sup>22)</sup>

연합국군사령부는 8월 28일 일본 점령을 위한 점령군 선견대를 일본에 내보냈다. 이때 귀환자 수송을 위하여 대형 선박의 통행을 허가했다. 점령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귀환선박 가운데는 興安丸이 가장 먼저 귀환자들을 수송한 선박으로 기록되고 있다. 패전 직후 興安丸의 귀환자 수송 상황에 대해서는 이 선박에 관한 다큐멘터리 작가 모리시타(森下研)의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 선박이 8월 30일 밤새 센자키항에서 한국인 귀환자를 싣고 8월 31일 오전에 센자키항을 떠나 당일 저녁에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9월 2일 아침에 대략 7,500명 정도의 일본인 귀환자를 태우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당일 오후 늦게 센자키항에 입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sup>23)</sup> 한편 두 번째 귀환선으로 기록되고 있는 德壽丸은 9월 2일 일본인 군인 군속 2,552명, 일반인 16명을 싣고 부산항을 떠나 이튿날 아침에 하카타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4)</sup> 아직 한반도에 미군이 진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일본인의 귀환 수송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듯 패전 직후 일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선박을 빌려 현해탄을 건너간 것을 필두로 하여 귀환선이 정비되면서 대규모 집단의 귀환이 이루어졌으며,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들 중 대부분은 1946년 2월 시점에 일본으로의 귀환을 마치게 된다. 일본 후생성의 귀환통계 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있던 일본인들이

22) 山名酒喜男, 1956, 『朝鮮總督府終政の記録(一): 終戦前後に於ける朝鮮事情概要』, 東京: 友邦協会, p. 18; 若槻泰雄, 1991, 위의 책, pp. 234-236.

23) 森下研, 1987, 『興安丸33年の航跡』, 東京: 新潮社, pp. 114-120.

24) 引揚援護庁長官官房総務課記録係(編), 1950, 『引揚援護の記録』, 東京: 引揚援護庁, [附録年表, p. 2];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 123.

패전과 함께 일본으로의 귀환을 시작하여 귀환활동이 거의 끝나는 시점인 1961년까지 총 6,288,665명이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한반도 38도선 남쪽 지역(남한)에서 귀환한 일본인 596,454명, 북한에서 귀환한 일본인 322,585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귀환활동은 1945년과 1946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1946년말까지 1년 5개월 동안 총 5,096,323명이 귀환했으며 이 가운데 남한 지역에서 571,765명이, 북한 지역에서 304,469명이 귀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5)</sup> 여기에 만주지역에서 한반도를 경유하여 귀환한 일본인 민간인과 군인들을 포함하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일본인들이 패전 직후 1년 정도의 기간에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귀환한 것이 된다. 한반도와 일본 본토 사이에 항로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중 대부분이 부산항을 통과하여 일본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sup>26)</sup>

### Ⅲ. 조선총독부의 귀환대책과 부산안내소의 활동

총독부는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일본 패전 이튿날인 8월 16일 조선총독부 교통국은 식량, 소금, 섬유, 잡화, 된장, 간장, 기타 생필품의 수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수송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sup>27)</sup>

25) 厚生省(編), 2000, 『續々引揚援護の記録』, 東京: クレス出版, p. 417.

26) 최영호, 2003. 9,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제와 원호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6집, pp. 6-8.

27)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p. 121-122.

- (1) 군대의 복귀수송
- (2) 각 방면의 군사, 기타 전력증강관계 공사, 공장이나 사업장의 노무자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자
- (3) 그 밖의 일반인은 제한 수송
- (4) 공습피신처로부터의 복귀수송
- (5) 일본본토 귀환을 희망하는 자의 수송 (부녀자를 우선으로 함)
- (6) 여객수송의 경우, 가급적 객차로 수송하며 객차 부족시 화차로 대체함

이 계획의 특징으로는 군인들을 우선적으로 귀환시키며 남은 여력을 이용하여 민간인을 수송하겠다는 방침이었다는 점과, 또한 민간인의 경우 패전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녀자들을 우선시하는 방침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총독부의 방침을 받아들여 지방 행정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비교적 세부적인 수송대책을 마련한 예로서는 인천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인천시청은 일찍이 8월 2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귀환수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내 일본인들에게 배포했다.<sup>28)</sup>

- (1) 일본인은 가능한 한반도에 재류하여 새로운 정부 육성에 협력할 것.
- (2) 일본 귀환자를 위해서 주요 지역에 귀환자 모임을 설치할 것.
- (3) 출발역, 주요역, 부두에 안내소를 설치할 것.
- (4) 군인 단체로 지도반을 구성하여 수송상 편의를 기할 것.
- (5) 일본의 귀환접수 태세를 살피면서 통제수송을 실시할 것.

---

28) 小谷益次郎, 1952, 『仁川引揚誌: 元仁川在住者名簿』, 福岡: 大起産業株式会社, pp. 5-7.

- (6) 한 달 수송력은 한반도 거주자 7만 명, 만주 10만 명, 중국 북부 3만 명, 계 20만 명으로 함.
- (7) 수하물 탁송에서 어른은 2개, 어린이는 1개로 1개 당 50kg 까지로 함.
- (8) 불용품 교환 모임을 설립할 것.
- (9) 하물탁송소를 설치하고 탁송하고 남은 짐을 맡길 것.
- (10) 열차는 원칙적으로 임시열차로 하며 보통열차에 별도의 칸을 연결함.
- (11) 부산에서 대기하는 귀환자에 대해서는 인천시청에서 주먹밥을 지급함.
- (12) 선상에서는 식사제공 없으며 귀환자는 이틀 분 이상의 도시락을 지참할 것.
- (13) 일본에는 소금이 부족하므로 배 안에서 지급함.
- (14) 수송증명서는 총독부에서 발행하며 뒷면에 주의할 것.
- (15) 일본에는 식량이 부족하므로 귀환자는 일본에서 배급받지 못할 것을 각오할 것.
- (16) 귀환 실시 즉 출발 예정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후가 됨.

이처럼 인천의 행정당국이 체계적인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일본인들의 무질서한 귀환 쇄도를 억제하려고 했던 것에 비하면, 부산의 행정당국은 이와는 달리 조기 귀환을 권장하는 태도로 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패전 직후 총독부로부터 각 행정직원으로 하여금 침착하게 직장을 지키라고 하는 지시가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부하라 도지사는 경찰부장 요네사와 쓰네미치(米沢常道), 농상부장 김덕기(金憲基) 등과 협의하여 일본인들을 가능한 조속히 귀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귀환을 서

두르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경남지방 오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조속히 경찰의 보호 아래 부산, 울산, 진해, 마산, 통영, 삼천포 등 항구로 나오게 할 것, 가능한 짐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 경찰서장은 그 임무를 마치는 대로 부산경찰서에 집결할 것 등을 명령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서장 자리는 점차 한국인에게 넘겨주고 일본인 경찰관은 점차 부산경찰서로 전근시켜 부산으로 집중시켰다.<sup>29)</sup> 이러한 조속한 귀환 권장 방침에 대해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생활기반을 쌓아온 일본인들은 “나약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영사관 설치, 거류민 조직 결성, 일본인 학교 설립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sup>30)</sup>

8월 24일 일본정부는 연합군군사령부의 요구에 따라 전쟁종결업무 연락을 위해 「종전연락중앙사무국」을 설치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에서도 8월 27일에 「종전사무처리본부」를 설치하고 하부부서로 총무부, 질총부, 정리부, 보호부를 두었다. 이 가운데 보호부가 「일본인의 일본귀환준비」 「잔류일본인의 단체조직」 「기타 개인과 법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보호부장으로는 총독부 농상국장이던 시라이시 고지로(白石光治郎)가 취임했다.<sup>31)</sup> 이에 따라 보호부가 일본인 귀환업무에 관한 주무부서가 되었으며 열차나 선박의 운행 통제와 피난민 수용소의 운영 관리업무 등을 담당했다. 보호부는 당초 존속기간을 1년으로 예정하고 10개월 동안에 걸쳐 한반도 거주 일본인 65만 명과 만주와 중국북부 거주자 130만 명을 송환할 계

29) 信原聖, 1961. 9, 위의 논문, p. 4.

30) 같은 논문, p. 4.

31) 原田大六, 「終戦に伴う引揚事務処理」,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1979,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第一巻』, 東京: 巖南堂書店, pp. 146-147.

획을 세웠으며 이를 위하여 28,805,600원의 예산을 책정했다.<sup>32)</sup>

한편 일본인 귀환자들의 수송을 위하여 총독부 교통국은 대규모 귀환자 수송을 위하여 귀환열차를 지정했다. 처음에는 서울역(京城驛)에서 출발하는 오전 6시 50분발 경부선 하행선 열차를 귀환열차로 배정했으며, 9월 10일에는 여기에 오전 10시발 열차를 추가하여 부산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귀환열차로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하루에 2대씩 배정했으며 대전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1대씩 추가 배정했다.<sup>33)</sup>

이와 함께 총독부는 보호부의 관할 아래 안내소를 설치하고 귀환자 수송과 원호업무를 담당하게 했다.<sup>34)</sup> 안내소에서는 열차와 선박에 탑승하려는 일본인들에게 특별수송 승차 승선 증명서를 교부했으며 이 증명서에 탑승할 열차와 선박을 지정했다. 증명서를 교부하는데 있어서 전쟁피난민·일반부녀자·「종전사무처리본부」 직원의 가족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일반인에게는 구청 등의 관공서를 통해 신청 순으로 증명서를 교부했으며 전쟁피난민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일반인에 대한 교부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가지고 갈 짐으로는 한 사람 당 2개의 탁송화물을 인정했으나 대부분 부산에서 배에 싣지 못했으며 9월 14일 이후에는 군정당국의 명령으로 이것마저 허용되지 않았다.<sup>35)</sup>

32) 같은 책, pp. 148-152.

33)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 122.

34) 총독부에서는 안내소 소장으로서 서울(山村正輔)·부산(一杉藤平)·대전(堤平太郎)·대구(水野薫)·전주(小泉弘)·광주(木下麟太郎)·여수(田所榮)·시모노세키(竹内俊平) 등 8개 안내소를 설치했으나, 결과적으로 서울·부산·시모노세키 안내소만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시모노세키 안내소는 나중에 센자키로 이전했다.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1979, 위의 책, p. 147.

35)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 122.

서울과 부산의 안내소는 당초에 일본인 학교만을 귀환자 수용 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을 초과하여 밀려드는 귀환자들로 인하여 8월 말부터는 한국인 교육시설을 접수하여 수용했으며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종교시설까지 수용시설로 활용했다.<sup>36)</sup> 부산안내소는 귀환자 수용시설로서 부산역 앞에 있던 마스라오관을 비롯하여, 제3국민학교·제7국민학교·공회당·삼도여고·부산중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했다. 9월 들어 귀환수송선이 모자라는 가운데 이러한 시설로도 모자라 예전에 세관창고로 쓰던 건물을 개조하여 수용시설로 사용하였으며 모자라는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서울에 요청하여 밀가루와 쌀을 지원받기도 했다.<sup>37)</sup>

부산안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는 “부산안내소가 애초에 일본에서 송환되어 오는 한국인의 접수도 실시했다”고 했으나, 한국인 귀환자에 대한 원호활동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sup>38)</sup> 부산안내소는 한국인 귀환자의 원호업무를 한국인 민간 원호단체에게 맡기고 오로지 일본인 귀환자에 대한 원호활동에 전념했던 것으로 보인다. 9월 1일에 결성되는 부산의 일본인세화회에서 내부 부서로서 다른 지역의 세화회와 달리 일찍이 10월 2일에 ‘안내소’라고 하는 부산안내소 임무를 인계받는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sup>39)</sup>, 세화회와 함께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 오

36)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1979, 위의 책, p. 153.

37) 같은 책, p. 154.

38)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 152.

39) 부산세화회 초대 안내소 소장은 靑柳嵯峨治가 역임했으나, 이 시기 丸山兵一가 안내소 소장과 세화회 원호부장을 함께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1980, 위의 책, pp. 395-397.

로지 일본인 귀환자의 송출 업무만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총독부는 국고보조금으로 부산세화회에 대해 1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그 가운데 50만 원을 부산안내소가 사용했다.<sup>40)</sup>

한편 미군정청이 들어서기까지 여전히 총독부가 행정권을 장악하는 기간에 조선은행권 화폐를 남발함으로써 남한에 물가 앙등을 초래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은행이 군정청에 접수되는 9월 30일 당시, 조선은행권 발행고는 8,680,198,000원으로 이는 1944년의 발행고와 비교하여 1년 사이에 64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었으며 1945년 7월의 발행고 4,698,220,000원보다 4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이었다.<sup>41)</sup> 특히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반 사이에 38억 4천만 원이 초과 발행되었다. 이러한 화폐 남발은 일본군 소집해제와 관공서·회사 등의 해산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 경비 지출이 많았던 것과 일본인 귀환자들이 대거 예금을 인출했던 것에 기인한다.<sup>42)</sup> 총독부는 이러한 예금 인출 및 일본 송금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sup>43)</sup>, 스스로 방만한 종전사무 처리를 행함으로써 해방된 남한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으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이다. 아무튼 9월 하순에 군정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종전사무처리본부」의 보호

40)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1979, 위의 책, p. 152; 山名酒喜男, 1956, 위의 책, p. 48.

41) カール・モスコビッチ(Karl Moskwitz), 1986,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の銀行の従業員達』. 東京: 殖銀行友會. pp. 196-197.

42) 多田井喜生, 2002, 『朝鮮銀行: ある円通貨圏の興亡』, 東京: PHP研究所, pp. 230-232. 이 기간 중에 예금 총액이 대체로 25억 정도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7억 원 정도가 일본 본토로 송금되었다. 또한 이 기간 중에 국고보조금 지출 초과액이 12억 원, 융자명령에 의한 대출과 일반대출액이 2억 5천만 원에 달했다. 山名酒喜男, 1956, 위의 책, p. 21.

43) 朝鮮銀行史編纂委員會, 『終戦前後の朝鮮銀行』,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1979, 위의 책, p. 209.



부는 해체되었고 이와 함께 안내소의 업무도 10월에 들어 세화 회로 인계되었다.

#### IV. 미군정청의 귀환대책과 부산지역 군정부대의 활동

9월 9일 서울에 진주한 미군은 9월 20일까지 총독부의 기구를 물려받는 형태로 군정청 조직을 정비했다. 귀환업무에 관한 주무 부서는 외사처(Foreign Affairs Section)가 되었으며 중앙 및 지방의 각 군정부서와의 연락을 취하면서 귀환자에 대한 수송과 원호를 담당하게 되었다. 외사처 안에서도 난민과(Displaced Persons Division)가 귀환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9월 22일 난민과장에 게인(Gane, W. J.) 중위가 임명되었다. 외사처는 귀환업무에 대해서 가능한 자생적인 귀환 원호단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중앙기구인 교통국과 위생국 방역과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sup>44)</sup> 9월 23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난민과에는 기획 및 특수계획반·운영반·통계정보반·연락반이 있었고 부산항에 로스(Ross, M. J.)중위 등을 파견하여 부산에 진주한 40사단 및 지방 군정팀의 지원을 받아 귀환자에 대한 원호 및 송출업무를 감독하게 했다. 군정청의 업무규정에 의하면 외사처 난민과의 당면한 임무로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sup>45)</sup>

---

44) Gane, William J. 1947, Repatriation: From 25 September 1945 to 31 December 1945. Seoul: Foreign Affairs Section, Headquarters USAMGIK, pp. 3-4.

45)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6, *Manual of Military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Seoul: The Office of Administration USAMGIK, p. 3.

- (1) 귀환해 온 사람들로부터 청취하여 해외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
- (2) 극동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한국인 귀환자에 대한 계획적 수용에 관해 군정당국과 연락을 유지할 것.
- (3) 한국을 출입하는 모든 귀환자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고, 관계부서(G-2)에 매일 보고할 것.
- (4) 서울 지역에서 귀환하는 일본인을 감독할 것. 열차의 배정, 각 지방 일본인 단체에 대한 통보, 열차에의 화물적재, 등을 감독할 것.
- (5) 일본인의 귀환에 관하여 관련 군정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각 도시에서 귀환하는 일본인에 대해 기록할 것, 그리고 귀환자들의 도착 예정 상황을 부산의 연락사무소에 통보할 것.
- (6) 한국에 잔류하는 일본인에 대해 통계기록을 유지할 것.

24군단의 지시에 의해 미군 제40사단이 경상남북도 지방의 일본인 무장해체를 담당하게 되었다. 9월 16일에 켈리(Kelly, J. P.) 소령이 이끄는 선발대가 부산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사단 주력 부대는 23일에 인천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에 진주해 들어 왔다. 부산항에서 일본인 군인 및 민간인의 귀환자에 대한 통제는 40사단의 160보병연대 인력이 담당했다.<sup>46)</sup> 경남의 군정 도지사에는 해리스(Harris, C. S)준장이 임명되어 9월 20일에 부임했으며 노부하라는 그의 자문역을 담당하게 되었다.<sup>47)</sup> 마찬가지로 부산

46)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편), 1993, 『지방미군정자료집 I: 한국현대사자료집시리즈1』, 서울: 경인문화사, pp. 28-34; 『민주중보』 1945년 9월 23일자, 1면.

47) 信原聖, 1961. 9. 위의 논문, p. 4. 信原聖은 10월말까지 자문역을 담당하다가 연락선을 타고 센자키로 귀환했다.

군정 시장에는 켈리 소령이 임명되었으며 그때까지 부산부윤(府尹)을 역임했던 도야마 오사무(富山修)도 부산에 남아 자문역을 담당하게 되었다.<sup>48)</sup> 10월 하순에 들어 26군정중대와 98군정중대 등 군정부대가 착착 진주하여 민간행정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다.<sup>49)</sup>

부산항이 군정당국에 접수된 것은 9월 23일이다. 그때까지는 일본군 부산병참사령부가 부두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승선 및 선박 수송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군정당국에 의해 부산항이 접수됨에 따라 일본인의 부두 출입이 금지되고 화물 반출 반입도 금지되었다. 군정당국은 일본인 귀환업무를 당분간 「종전사무처리본부」 부산안내소에게 맡겼다가 한 달 후에 부산세화회에 인계했다. 해리스 준장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9월 23일 오후에 무질서한 일본인의 개별적인 귀환을 중지하고 오직 정식 귀환선박을 통하여 질서 있는 귀환을 실시하라고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표했다.<sup>50)</sup>

현재 부산 재주 일본군인과 일본시민을 속히 본국으로 귀환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부산항 제1부두에 집합을 개시하고 휴대품은 수하물로 한정한다. 속히 귀환 준비를 완료하기 바라며 현재 성행하고 있는 밀항선 이용은 절대로 금지한다. 금일부터 일본으로 도항할 선

48) 富山修는 경남의 일본인 관리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부산에 남아 있다가 12월 하순에 일본으로 귀환했다. 『민주중보』, 1945년 12월 28일자, 2면.

49) 국사편찬위원회(편), 2000, 『미군정기 군정단 군정부대 문서4: 한국현대사자료집성50』,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p. 11; 신중대, 1993, 『해방직후 부산경남지방의 변혁운동』,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1.영남편』, 서울: 여강, pp. 242-246.

50) 『민주중보』 1945년 9월 25일자, 2면. 이러한 업포에도 불구하고 10월 말까지 소형선박에 의한 일본인의 개별적인 귀환이 계속되었다.

편은 연락선에 위탁할 뿐이며 그 승선권은 미군군정 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다. 밀항선에 대해서는 군정당국이 많은 감시선을 출동시켜 부산항 부근이나釜關 노선 중간에 배치하여 엄하게 감시할 것이다. 감시대에 발각되는 밀항선은 군정당국을 무시하는 무리로 간주하고 선체는 물론 탑재 화물까지 폭파할 것이며 승무원 승객은 군정의 방침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미군정 당국은 여타 지역의 점령지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무장 해제된 일본군 병사들을 최우선으로 하여 귀환시켰다. 한반도에서 소집되었다가 패전과 함께 이미 가정에 돌아간 자를 다시 소집하여 군인의 신분으로서 귀향시키기까지 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신관(神官)·일본기생(芸者) 등 한국인들로부터 우선적으로 폭행 피해를 받을 소지가 많은 사람들을 특히 우선순위로 하여 귀환시켰다.<sup>51)</sup>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귀환을 기다리는 일본인 민간인들이 겪고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은 군정청의 조직이 정비된 후 10월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10월 3일 군정장관 아놀드(Arnold, A. V.)는 「중전사무처리본부」 보호부장을 통하여 일본인사회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sup>52)</sup>

- (1) 10월 4일부터 당분간 귀환열차 운행을 중지한다.
- (2) 서울·대전·대구·수원 및 김천을 귀환자 집결지로 지정했으므로 수송을 재개할 때는 군정청의 지시를 따

51) 若槻泰雄, 1991, 위의 책, pp. 237-238.

52)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 352.

라 이상의 집결지에 집결하여 귀환하는 것으로 한다.

(3) 앞으로는 군정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귀환자에게 교부할 것이다.

(4) 대도시의 치안과 일본군대의 송환 촉진을 위하여 모든 일본인은 관련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재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같은 날 군정장관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일본인은 군정당국의 지도 아래 수송력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귀환시킬 예정이다. 아직 귀환하지 않은 일본인은 본인과 가족의 성명을 가까운 일본인 구제기관에 등록하고, 귀환계획을 실시할 경우 이에 포함되도록 수속을 취해야 한다. 일본인의 개인적인 귀환은 금지한다. 귀환에 관한 상세한 지시는 수시로 공표할 것이다”라고 했다.<sup>53)</sup>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군정청은 10월 8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령 10호를 발령하여 일본인들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개별적인 귀환 이동을 금지시켰다.<sup>54)</sup>

(제1조) 일본인은 모두 경찰서를 경유하여 군정청으로부터 발급되는 허가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거주지의 Bloc Association(세화회) 사무소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할 수 없다. 이 범

53) 『京城日本人世和會會報』 28号 (1945年 10月 4日), p. 1. 京城세화회에서는 담화문 가운데 ‘일본인 구제기관’이 「중전사무처리본부」 혹은 일본인세화회를 지칭하는지에 관하여 군정청에 조회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인세화회 같은 성격의 기관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아직 세화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던 지방에서도 서둘러 세화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 353.

54) 『京城日本人世和會會報』 34号 (1945年 10月 13日), p. 1.

위 안에서 여행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발 당일 야간통행금지 시각까지 귀가해야 한다.

(제2조) 군정청의 포고가 있을 때 모든 일본인은 세화회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세화회 대표는 매일 등록결과를 집계하여 다음날 정오까지 시·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이것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청에서는 이것을 곧바로 군정청 외사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 본 법령은 도지사의 고시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본 법령의 위반자는 군정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군정청은 귀환자들의 계획적인 수송을 위해 10월 10일부터 수송열차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했으며 10월 23일부터 본격적인 계획수송을 시작하여 경인(京仁)지구 일본인들부터 승차하게 되었다. 10월 24일부터 귀환자 수송을 위해 매일 두 대의 열차가 서울(용산역)에서 부산으로 향했으며 많을 때는 하루 세 차례 운행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18시간이 걸렸다. 계획수송 처음에는 대부분 북한에서 건너와 서울의 수용소에 들어있던 피난민들을 수송했으며, 11월 3일부터는 군인유가족을, 11월 8일과 9일부터는 직업별 지역단체별 수송을 시작했다. 계획수송의 실시에 따라 잔류 일본인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에 귀환수송 횟수도 줄어들었다. 11월 17일부터는 오후 3시에 출발하는 열차 하나만 운행하게 되었으며, 11월 24일부터는 단체수송이 끝나고 개인 신청자에 대한 수송이 시작되면서 4일에 한 차례 운행했고, 12월에 들어서서는 일주일 내지 열흘에 한 차례 운행하게 되었다.<sup>55)</sup>

난민과장 계인은 군정청이 집계한 일본인 귀환자 통계를 재정리하여 그의 저서를 통해 발표했다. 열차를 포함하여 모든 교통수단을 통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사이에 일본으로 귀환한 민간인 숫자에 대하여, 그는 8월 63,648명, 9월 105,207명, 10월 104,981명, 11월 163,920명, 12월 32,008명으로, 총 469,764명이 귀환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귀환 군인의 숫자에 대해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사이에 총 176,241명이 귀환한 것으로 집계했다.<sup>56)</sup> 이와 함께 열차를 통하여 수송한 일본인 귀환자 총 240,830명에 대해서는 다음 [표-1]과 같이 월별로 집계했다.<sup>57)</sup>

[표-1] 열차 귀환 일본인 수 (1945년 8월 23일 ~ 12월 29일)

월별	출발지	횟수	인원	월별	출발지	횟수	인원	월별	출발지	횟수	인원
8월	서울	3	3,000	11월	서울	36	79,623	12월	서울	9	10,322
9월	서울	28	50,150		인천	5	10,001		인천	3	1,594
10월	서울	18	37,568		개성	1	1,426		대전	1	163
	서울·수원	1	2,250		영등포	1	750		전주	2	879
	수원	2	4,417		대전	2	2,625		군산	6	3,593
	인천	1	1,380		전주	8	7,056		남원	1	712
	대전				이리	1	1,622		광주	1	602
			군산		5	5,109	목포		1	385	
			김제		1	948	대구		1	300	
			광주		4	2,319	안동		1	65	
			목포		12	7,908					
			대구		2	3,150					
			수원·대전	1	833						
			김천	8	80						

55)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p. 361-365.

56) Gane, 1946, 위의 책, pp. 91-92. 계인은 9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주간별로 귀환 군인의 수를 정리했으며 이 기간에 총 176,241명이 귀환한 것으로 집계했다.

57) 같은 책 pp. 93-97. 계인은 출발시각에 따라 열차로 수송된 일본인 수를 정리했다.

## V. 일본인 세화회의 조직과 활동

일찍이 8월 16일 조선총독부에서는 총독과 정무총감이 재경일본인 가운데 유력인사를 불러들여 패전 정국에 대한 설명을 행하고 일본인 사회의 자구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당시 경성전기회사 사장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 조선섬유산업회사 사장 유무라 신지로(湯村辰二郎), 조선농지개발영단 이사장 와타나베 시노부(渡辺忍)와 함께 지난날 조선상공회의소 소장을 역임한 히토미 지로(人見二郎) 등이 참석했다. 총독부는 총독부 스스로의 조직력 약화와 함께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를 앞두고 조선군도 치안통제력을 상실해 가는 가운데 결국 일본인의 보호와 치안확보를 일본인 스스로가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전달했다.<sup>58)</sup> 이를 계기로 하여 재경일본인들은 자생적인 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이쥬인 가네오(伊集院兼雄)의 권유와 알선으로 8월 18일 경성전기회사 사장실에서 소수 재경일본인 유지들이 회합하여 일본인 단체를 결성하기로 했으며 8월 20일에 소공동(長谷川町)에 있던 경기도 상공경제회에서 「경성내지인세화회(京城内地人世和會)」라는 이름으로 정식 발족했다. 사무실은 상공경제회 건물 내에 두었으며 초대 회장에는 호즈미가 결정되었다. 호즈미는 1914년에 조선총독부에 들어가 28년 동안 관료생활을 보냈으며 척산(拓産)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58)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p. 132-133.



1943년에 경성전기회사 사장에 취임했으며 조선상공경제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식민지 인사들과 널리 친분이 있을 뿐 아니라 총독부와도 인맥을 널리 유지하고 있었다.<sup>59)</sup>

세화회는 8월 25일 제정된 규약의 제2조에서 명시한 대로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사이의 상호 연락 및 협조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총독부의 지도 아래 일본인에 관한 업무와 사무에 대하여 협력하고 상담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발족 당시 발표한 취지문(趣意書)은 “우리는 급변하는 시기를 맞아 승조필근(承詔必謹)하며 충성된 신하로서의 성의를 바침과 동시에 대국민(大國民)으로서 금도(襟度)를 보여야 한다. 특히 다가올 새로운 조선을 위해서는 좋은 협력자로서 영광된 발전에 전폭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가정과 직장에서 각자 침착하게 자신의 직분에 대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sup>60)</sup> 이는 당시 서울에 있던 일본인 유지들이 식민지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적 변화를 얼마나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sup>61)</sup>

서울에서 세화회가 결성된 것이 알려지고 총독부가 지방기관을 통해 이를 권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세화회 결성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서울과 지방에서 모두 처음에는 ‘내지인’ 세화회라

---

59) 같은 책, p. 133.

60) 같은 책, p. 137. 취지문의 초안은 경성일보 기자 安井俊雄이 작성했으며 초안 그대로 발기인 모임에서 통과되었다.

61) 패전 직후 한반도 특히 남한에 거주하는 일본인 대부분이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 서로 전쟁을 경험한 일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패전’이라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도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식민지 통치자로서 군림해 왔다는 의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編), 1999, 『資料所在調査結果報告書(別冊)』, 東京: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p. 3.

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일본인’ 세화회로 명칭을 바꾸었다.<sup>62)</sup>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미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어 ‘내지인’ ‘조선인’의 구별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sup>63)</sup> 즉 이러한 명칭 변경은 일본인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차 한반도의 해방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의 세화회에서는 한반도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그룹과 일본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하는 그룹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다. 패전 당시에는 대체로 많은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잔류하기를 희망했으며 잔류 일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주민단을 예상하고 세화회를 결성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 오랜 거주 경험과 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세화회의 대표자로 선정되었다.<sup>64)</sup>

1) 부산경남지역 일본인 귀환자에 대한 부산세화회의 원호활동

부산의 세화회는 식민지 시기 수산 재벌로서 경남상공회의소 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가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郎)를 회장으로 하여, 9월 1일 「부산내지인세화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가시이가 일찍이 일본에 귀환하면서 임원진이 대폭 바뀌었으며 조직 명칭도 「부산일본인세화회」로 바뀌었다. 일본 귀환이 용이한 지역이었던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조직 구성원의 변동이 심했으며 12월까지 한 달에 한번씩 회장이 바뀔 정도였다.<sup>65)</sup>

62) 서울의 세화회가 1호(9월 2일) 이후 거의 매일 발행하고 있던 회보 『京城内地人世和會會報』도 세화회 명칭의 변경에 따라 13호(9월 15일)부터 『京城日本人世和會會報』로 바뀌었다.

63)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1993, 위의 책, p. 215.

64)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 146. 今村勳은 지방 세화회의 幹事들은 거의 한반도 잔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1993, 위의 책, p. 215.

부산세화회 활동에 대해서는 마루야마가 안내소장을 역임하면서 기록한 「부산일본인세화회의 활동」이 가장 상세한 자료로 남아있어<sup>66)</sup>, 이 자료를 중심으로 활동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부산세화회는 애초 거류민단 조직과 같은 성격으로 발족한 것으로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인 귀환 의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지역 일본인들에게 가능한 귀환을 억제할 방침으로 지도를 행했다. 설립 직후 이북지방 또는 남한의 타 지역에서 쇄도해 오는 귀환자들이 많아서 수송수단 조건상 부산 경남지역 일본인들이 연락선을 이용하여 귀환하기에는 곤란한 상태였다. 따라서 설립 직후(9월 초순까지)에는 경남도내 각지에서 부산으로 밀려오는 일본인들을 억제하는데 급급했다. 9월 중순부터 10월 하순에 걸쳐 소형 선박에 의한 귀환이 활발했던 상황에서 세화회의 귀환 억제 대책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세화회가 우선 담당했던 일은 기범선과 같은 소형선박의 운항을 통제하고 선박 운임을 통제하여 폭등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0월 20일 이후에는 하물 수송 금지와 함께 소형선박의 운항도 금지되면서 세화회는 연락선에 의한 계획수송 업무에 관여하게 된다. 계획수송은 10월 25일부터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10월 22일 「중전사무처리본부」 부산안내소로부터 귀환원호 업무를 인계받은 세화회는 애초의 거류민단적 성격으로부터 귀환원호단체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sup>67)</sup> 세화회에서는 다

65) 부산세화회 역대 회장은 다음과 같다. ①香椎源太郎(45.9.1부터), ②池田佐忠(45.10.2부터), ③芥川典(45.11.10부터), ④鏡一以(45.12.5부터 47년12말까지), ⑤森田国政(47년12월부터 48년6월까지).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1980, 위의 책, pp. 396-399.

66) 같은 책, pp. 390-396.

67) 식민지 시기에 부산고등법원장을 지낸 鏡一以가 12월 5일부터 새로 회장직을

음과 같은 승선 계획을 세웠다.

- (1) 계획수송에 의하여 타지역에서 부산에 들어오는 귀환자에게는 접수번호 순으로 승선시킨다.
- (2) 계획수송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부산에 들어오는 귀환자에게는 일정 기간 숙사에 수용하고 단체를 결성한 뒤 승선시킨다.
- (3) 부산경남 거주자의 귀환에 대해서는 단독 승선을 금지하고 250명 정도의 인원이 될 때까지 수용소에 수용한 뒤 그룹을 이룬 후에 승선시킨다.

이러한 방침에 의거 세화회는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을 임시로 지은사(智恩寺)에 수용하고 10월 22일 이후부터 그룹에 의한 계획적인 귀환을 실시했다. 이렇게 하여 부산경남 거주자 가운데 부산세화회의 통제를 받아 귀환한 일본인이 10월 중에 16개 그룹 11,100명, 11월 중에 39개 그룹 14,800명, 12월 중에 61개 그룹 9,600명으로, 도합 35,500명에 달한 것으로 세화회는 파악했다.

## 2) 타지역 일본인 귀환자에 대한 부산세화회의 원호활동

10월과 11월 사이에 남한 거주 일본인들의 귀환이 대거 이루어

---

말으면서 부산세화회는 그 성격이 바뀌었다. 그는 세화회 규약 제2조(목적)의 규정을 기존의 “일본인 상호간의 연락협력 나아가 상호부조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개정하여 “미군정에 협력하고 모든 사태에 적응하며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고 이로써 일본인의 지도 나아가 전제자의 구제 및 귀환에 관한 모든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전제 귀환자 원호단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 671;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1980, 위의 책, p. 397.

졌으며 그 중에도 11월에 최고조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 부산 거주 일본인들이 거의 귀환한 가운데 마루야마 원호부장은 일본 센자키에 건너가 일본인 귀환자에 대한 원호 수송 업무를 희망하는 일본인 청년 25명을 데리고 부산에 돌아왔으며, 세화회를 통해 귀환원호 활동에 매달렸다. 마루야마는 다른 자료에서 10월 2일에 부산에서 일본인들을 수용하고 있던 시설과 인원의 현황으로 다음 [표-2]와 같은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sup>68)</sup> 당시 얼마나 많은 부산항이 일본인 귀환자들로 붐볐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통계이다.

[표-2] 부산의 일본인 수용시설 및 수용인원 현황  
(1945년 10월 2일)

수용시설	정원	최대수용력	수용인원	정원초과인원
西本願寺	1,000	2,000	2,500	1,500
東本願寺	1,000	2,000	2,500	1,500
金剛寺	300	500	700	400
智恩寺	300	500	700	400
妙覺寺	150	200	300	150
金光敎	150	200	300	150
出雲大社	300	500	700	400
마스라오관	1,500	2,000	2,500	1,000
제7국민학교	2,000	4,000	4,700	2,700
식물검사소	700	1,000	1,500	800
세관창고	5,000	7,500	8,600	3,600
합계	12,400	20,500	25,000	12,600

여기에는 북한 지역에서 탈출해 오는 일본인들도 섞여 있었다. 9월에 들어서부터 무리를 지어 38선을 넘어 남하해 온 일본인들의 처참한 모습들이 부산에서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 헐벗고 굶주린 상태로 먹을 것 가진 것도 없이 육체적

68) 加藤聖文(編), 2002, 위의 책, pp. 325-326.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모습들이었으며 응급 원호조치를 요하는 사람들이었다. 서울과 부산의 세화회는 이처럼 형편이 어려운 일본인 귀환자들을 위하여 의료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일본인 의사와 의대생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북한지방에서 피난해 오는 일본인을 비롯하여 귀환을 대기하는 일본인들에게 의료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세화회는 이들에 대해 의약품을 지원했다. 부산 세화회 직원 미야케 가즈미(三宅一美)는 1945년 9월부터 1948년 7월까지 부산에 남아 원호업무에 종사하면서 부산항에서 귀환하는 탈북 일본인들의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았다.<sup>69)</sup>

남한 거주 일본인들이 거의 귀환한 시점인 1946년 2월부터 세화회는 북한에서 남하해 오는 일본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원호활동을 전개했다.<sup>70)</sup> 그 해 5월 상해(上海)에서 부산으로 상륙해 온 한국인 선원이 콜레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하여, 군정당국은 5월 말부터 부산항 사용을 금지시키고 군산과 인천항을 대체 귀환항으로 지정했다. 그 후 콜레라가 수그러들자 8월부터 다시 부산항을 사용하게 했다.<sup>71)</sup>

마루야마 원호부장은 1945년 8월부터 1947년 1월까지 부산항을 경유하여 귀환한 일본인 수를 다음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72)</sup> 이것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인 귀환자 수의 전모를 밝히고 있는 귀중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8월의 수치는 그 근거가 희박할 뿐 아니라 무질서한 대규모 귀환자 쇄

69) 木村秀明, 1980, 『ある戦後史の序章: MRU引揚医療の記録』, 福岡市: 西日本図書館コンサルタント協会, pp. 41-47.

70) 奥村芳太郎(編), 1970, 『在外邦人引揚の記録: この祖国への切なる慕情』, 東京: 毎日新聞社, pp. 126-161.

71)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p. 693-710.

72) 丸山兵一, 1961. 10, 위의 논문, p. 4; 加藤聖文(編), 2002, 위의 책, pp. 350-351.

도 상황을 무시한 너무도 적은 수를 제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9월 이후의 통계는 일본인 귀환자 수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표-3] 부산항 경유 일본인 귀환자수

年月	38線以南	38線以北	計
1945. 8.	4,895	-	4,895
9.	100,682	26,808	127,490
10.	169,263	-	169,263
11.	176,376	-	176,376
12.	27,740	5,168	32,908
1946. 1.	4,083	5,996	10,079
2.	5,379	1,732	7,111
3.	2,257	5,973	8,230
4.	625	28,404	29,029
5.	117	40,511	40,628
6.	53	3,091	3,144
7.	-	538	538
8.	-	19,289	19,289
9.	-	19,355	19,355
10.	-	13,453	13,453
11.	-	8,370	8,370
12.	-	4,040	4,040
1947. 1.	-	208	208
합계	491,470	182,936	674,406

## 3) 부산세화회의 원호활동을 위한 재원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예산 충당을 위하여 서울의 세화회는 설립 초기부터 모금을 실시했다. 8월과 9월에 걸쳐 초기에 총독부와 「중전사무처리본부」, 「조선금융단」, 「조선식량협회」 등으로부터 1,7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모았다.<sup>73)</sup> 그러나 이러한 기부금 행위는 군정청이 법령2호를 통해 규정한 공공단체의 현금 유통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검찰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1월에 기부금 가운데 극히 일부분인 151,500원만을 반환을 요청하는 단체에게 되돌려 주게 되었다.<sup>74)</sup>

여기에 11월부터 군정청이 예산을 관리함에 따라 세화회는 그때까지 풍부하게 사용해 오던 예산을 아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궁핍해진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책을 궁리하게 되었다. 몇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 일본점령군사령부와 군정당국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군정청이 직접 원호금과 구호물품을 지급했다.<sup>75)</sup> 세화회는 잔류 일본인들로부터 현금을 차입하고 나중에 일본에 귀환한 후에 갚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서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했다.<sup>76)</sup> 1945년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세화회의 재정 수입으로는 기부금이 약 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차입금(약 27만원), 부동산 관리 수수료 및 불용품 매각대금 약 3만6천원 순이었다.<sup>77)</sup>

73) 森田芳夫, 1964, 위의 책, p. 315.

74) 같은 책, pp. 552-553.

75) 같은 책, pp. 553-556.

76) 같은 책, pp. 973-977.

77) 같은 책, pp. 556-557.



한편 부산세화회는 서울세화회에 비해서 군정청으로부터 비교적 후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부산항이 일본인들의 귀환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산세화회에 귀환 원호업무 부담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산세화회 결성 후 1946년 3월말까지 서울 군정청은 서울세화회에 약 170,000원 정도를 지급했으나 같은 기간에 경남 군정청은 부산세화회에 대해 423,000원을 지급했다. 또한 서울세화회의 자체 자금은 동결 당했지만 부산세화회의 경우는 동결 당하지 않았다. 여기에 미군으로부터 원호물자를 지원 받았으며 세화회 직원이 수용소 안에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 재정적인 면에서 부산세화회는 서울세화회보다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9월부터 1946년 3월까지 부산세화회가 사용한 경비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sup>78)</sup>

[표-4] 부산세화회의 경비 내역

(1945년 9월~1946년 3월 단위 원)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종전사무처리본부보조금	500,000	급식비	212,662
군정청교부금	423,000	원호비	328,738
기부금	350,150	의료비	33,045
의료수익금	4,090	원호잡비	73,083
환불금	7,125	사무비	61,358
		인건비	330,177
		복지비	106,988
		시설비	102,007
계	1,284,365	계	1,248,058
		잔금	36,307

※ 수입 지출금액은 전(錢) 부분을 반올림한 것임

78) 같은 책, pp. 564-565.

그렇지만 부산항에서 귀환하는 일본인 귀환자에게 원호 지원을 하기에는 충분한 재정 상태는 아니었다. 서울 세화회 초대회장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가 1946년 3월에 일본에 돌아가 지속적으로 일본의 여론에 한반도 귀환 원호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부산세화회가 군정청으로부터 받는 교부금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밀려오는 북한 탈출자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에서는 물론 부산에서 승선할 때까지도 식사다운 식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선내에서조차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영양실조 정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연락선으로 충분한 식량을 운반해 줄 것을 일본정부에 청원했다.<sup>79)</sup> 남한 지역에서 귀환한 일본인들은 조선총독부 관료 출신자들과 세화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에서 원호단체를 결성하여 귀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미귀환자들의 귀환촉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sup>80)</sup>

## VI. 맺음말

이상으로 관련 자료를 통하여 부산항의 일본인 귀환 상황과 이들을 둘러싼 원호단체들을 살펴보았다. 패전직후 개별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도 67만여명이 부산항을 통해 귀환했다. 이들의 원호를 위하여 일시 총독부 「중전사무처리본부」 산하 안내소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군정부대의 진주 이후에는 일본인세화회가 담당했다. 본 논문을 통하여 패전직후 부산의 일본인 귀환상황에 관한 일차적인 자료의

79) 穂積真六郎, 1946. 7, 「在鮮邦人の引揚状況」, 『引揚同胞』 34号, pp. 29-31.

80) 노기영, 2006. 6, 「해방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 『한일민족문제연구』 10호, pp. 137-144.

존재와 함께 귀환자들의 원호를 둘러싼 조직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상세히 밝혀졌다고 본다.

결론으로는 부산항을 통해 귀환하는 일본인들의 현실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모리시타의 작품 가운데는 공식 귀환선박 제1호 고안마루(興安丸)로 귀환하는 일본인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sup>81)</sup>

부산에서 興安丸을 맞은 일본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기다렸다. 이제야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부두에 모여서 기뻐한 것은 귀국하려다가 패전을 맞은 사람이나 북한 지방에서 피난해 온 사람들이었다. 또한 남한 지방도시에서 모여든 사람도 많았다. 그들은 소련 참전과 동시에 군대의 지시로 임전태세를 갖추기는 했지만 적군이 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전을 맞았다. 대신 현지인들의 불온한 움직임에 위협을 당하자 부산으로 도망쳐 왔다고 한다.

그러나 부산에 주거지를 둔 일본인 가운데는 사태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한반도가 일본에 병합된 지 3분의 1 세기가 지나면서 초기에 건너온 사람들은 세대도 바뀌고 새로운 고향으로써 정착하게 된 것이다. 해외 거주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도 이때에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생략)

승선이 시작되자 승무원도 귀환자도 모두 패전이라는 현실의 의미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일찍이 국가 독립을 목표로 하는 자치조직이 생겨났다. 승선자들은 그 조직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그것은 매우 엄중한 것이었다. 한국측이 지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화폐 소지는 금지되었고 이 국가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모두 몰수당했다. 비록 그것이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는 증거가 있더라도 절대 용납되지 않았다. 검사원에게 몸 구석구석까지 수색 당했으며 약간의 위반에 대해서도 격한 욕설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굴욕은 바로 반 달 전까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81) 森下研, 1987, 위의 책, pp. 119-120.

한반도 사람들에게 대해 취했던 태도를 뒤집어놓은 것이었다.

9월 2일 아침 興安丸은 부산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가득 채운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배안의 공기는 전혀 달랐다. 마침내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갑판 손잡이를 부여잡고 동쪽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캐빈 구석에 허탈한 표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다.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으며 이때금 입을 열어 작은 소리로 쏘곤거리듯이 말했다. 그런 가운데 모두가 주위에 각각 자욱한 회색빛 침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모든 것을 잃은 슬픔, 내일부터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

필자는 세화회 「회보」의 내용을 분석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귀환해 가는 일본인들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밝히고자 하여 조사를 시도한 일이 있다. 당시 해방감에 들떠있는 한반도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지난날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1) 식민자와 피식민자가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같이 했다고 보는 인식, (2) 아름다운 자연을 빌어 정치적 경제적 조건을 도외시하거나 덮어두고자 하는 인식, (3) 과거가 어땠던 간에 이제는 서로 외국인이 되었다는 인식, (4) 식민지시기에 일본인이 훌륭한 경영을 했다는 인식, (5) 보다 나은 통치를 왜 하지 못했나 하는 반성 인식 등의 표현이 부분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파악했다.<sup>82)</sup>

또한 필자는 부관항로를 이용하여 귀환한 일본인들의 회고 기록들을 토대로 하여 그들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비록 훗날에 기록된 것이어서 패전 직후의 인식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일본인 귀환자들이 그들의 회상 기록에서 분명한 기억을 되살리며 주로 안전하게 귀환한

82) 최영호, 2007. 11, 「귀환과정에서 나타난 제조일본인의 식민지 인식」, 『한국민족운동사학회월례회발표문』, pp. 16-21.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안도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소수 귀환자 가운데서 식민 지배에 대한 인식으로는 “식민지 상실이 분했다”라고 회상하는 사람도 있었고, “식민지 지배는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회상하는 사람도 있었다.<sup>83)</sup>

참 고 문 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 『지방미군정자료집 I: 한국현대사자료집시리즈1』, 서울: 경인문화사, 1993년.
- 국사편찬위원회(편), 『미군정기 군정단 군정부대 문서4: 한국현대사자료집성 50』,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0년.
- 김인호, 「1945년 부산지역의 도시소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호 (2004년 12월).
- 노기영, 「해방후 일본인의 귀환과 중앙일한협회」, 『한일민족문제연구』 10호 (2006년 6월).
- 박원표, 『부산의古今』, 부산: 현대출판사, 1965년.
-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1.영남편』, 서울: 여강, 1993년.
- 차철욱,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 사업체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성격」 『지역과 역사』 1호 (1996년 6월).
- 최영호,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6집 (2003년 9월).
- 최영호, 「일본의 패전과 부관연락선: 부관항로의 귀환자들」, 『한일민족문제연구』 11호 (2006년 12월).
- 최해균, 『부산7000년, 그 영욕의 발자취②: 개항부터 일제말까지』,

83) 최영호, 2006. 12, 「일본의 패전과 부관연락선: 부관항로의 귀환자들」, 『한일민족문제연구』 11호, pp. 262-270.

부산: 도서출판 지평, 1997년.

홍연진, 「부관연락선 시말과 부산부 일본인 인구변동」 『한일민족 문제연구』, 11호 (2006년 12월).

『민주중보』

카를로스코비치(Karl Moskowitz),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の銀行の従業員達』, 東京: 殖銀行友會, 1986年.

多田井喜生, 『朝鮮銀行: ある円通貨圏の興亡』, 東京: PHP研究所, 2002年.

奥村芳太郎(編), 『在外邦人引揚の記録: この祖国への切なる慕情』, 東京: 毎日新聞社, 1970年.

小谷益次郎, 『仁川引揚誌: 元仁川在住者名簿』, 福岡: 大起産業株式会社, 1952年.

加藤聖文(編), 『海外引揚関係史料集成(国外篇)第19卷』(朝鮮篇二『終戦後朝鮮における日本人の状況および引揚(二)』), 東京: ゆまに書房, 2002年.

木村秀明, 『ある戦後史の序章: MRU引揚医療の記録』, 福岡市: 西日本図書館コンサルタント協会, 1980年.

厚生省(編), 『續々引揚援護の記録』, 東京: クレス出版, 2000年.

鮮交会(編), 『朝鮮交通回顧録: 終戦記録編』, 東京: 鮮交会, 1976年.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東京: 岩波書店, 2002年.

信原聖, 「終戦以後の慶尚南道」, 『同和』 165号 (1961年 9月 1日).

樋口雄一, 『協和会: 戦時下朝鮮人統制組織の研究』, 東京: 社会評論社, 1986年.

引揚援護庁長官官房総務課記録係(編), 『引揚援護の記録』, 東京: 引揚援護庁, 1950年.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編), 『資料所在調査結果報告書(I): 資料が示す今次大戦における恩給欠格者・戦後強

- 制抑留者及び海外引揚者の労苦』, 東京: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1993年.
-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編), 『資料所在調査結果報告書(別冊)』, 東京: 平和祈念事業特別基金, 1999年.
- 穂積真六郎, 「在鮮邦人の引揚状況」, 『引揚同胞』 3・4号 (1946年 7月).
- 丸山兵一, 「慶尙南道および釜山の引揚(二)」, 『同和』 166号 (1961年 10月 1日).
- 森下研, 『興安丸33年の航跡』, 東京: 新潮社, 1987年.
- 森田芳夫, 『朝鮮終戦の記録: 米ソ両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東京:  
巖南堂書店, 1964年.
-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第一巻』, 東京: 巖南堂書店, 1979年.
- 森田芳夫・長田かな子(編), 『朝鮮終戦の記録: 資料編第二巻』, 東京: 巖南堂書店, 1980年.
- 山名酒喜男, 『朝鮮総督府終政の記録(一): 終戦前後に於ける朝鮮事情概要』, 東京: 友邦協会, 1956年.
- 若槻泰雄, 『戦後引揚げの記録』, 東京: 時事通信社, 1991年.
- ワグナー(Wagner, Edward W.), 『日本における朝鮮少数民族: 1904~1950年(復刻版)』, 東京: 竜溪書舎, 1989年.
- 『京城日本人世和会会報』
- Gane, William J. *Repatriation: From 25 September 1945 to 31 December 1945*. Seoul: Foreign Affairs Section, Headquarters USAMGIK, 1947.
-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Manual of Military Govern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Seoul: The Office of Administration USAMGIK, 1946.